우리당계, 민주당 당직 싹쓸이 내홍

대표·원내대표·사무총장·정책위장 이어 국회부의장도 차지

구 민주계 "향후 당무 운영서 실력 행사 하겠다" 강력 반발

국회 부의장 경선이 끝난 뒤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국회 부의장 경선에서 열린우리당계인 4선의 문희상 의원이 구 민주계인 5선의 박상천 전 대표를 제압함에 따라 우리당 출신이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당 요직을 독식한 데 이어 국회부의장까지 차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직자 인적구도도 구 민주계보다는 열린우리당 출신 인사들이 주요 포스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열린우리당계는 원내·외 구분없이 당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됐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구 민주당계를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형성되면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계파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구 민주계를 중심으로 '돌고 돌아 우리당', '민주계가 타살됐다'는 노골적인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당무운영 등에서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며 벼르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구 민주당 출신인 박주선·김민석 최고위원과 현역 의원, 원외위원장들이 정 대표 체제의 당무 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당초 구 민주계는 박 전 대표를 합의추대하기 위해 애썼으나 후발주자로 경선에 뛰어든 문 의원이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아 경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앞선 원내대표와 당 대표 경선에서 원혜영 원내대표와 정세균 대표를 지원했던 구 민주계는 국회 부의장 선출에서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新)주류'의 암묵적 지지를 기대해왔다.

실제로 당 주변에서는 정 대표측과 박 전 대표측 간에 '전략적 제휴'로 인해 박 전 대표가 부의장에 당선될 것이라는 말이 떠돌기도 했으나 결과는 반대였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 민주계 인사들은 부의장 경선 직후 박 전 대표와 함께 모여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일부 지역구 의원은 탈당 카드까지 거론하는 등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는 후문이다.

민주계 비례대표인 모 의원 "정 대표가 도왔다면 이런 표결 결과가 나왔겠느냐"며 "정 대표가 과연 어떻게 당을 운영해 가는지 두고 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구 민주계 핵심의원은 "주류가 도와줄 것처럼 하다가 막판에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것은 비판받아 충분하다"고 주장했고, 비례대표 의원 상당수가 문 의원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손학규 전 대표를 겨냥,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세균 대표 체제가 출범 초반부터 열린우리당계와 구 민주계간 불협화음으로 당내 화합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호남지역 예산 확보에 최선"

박재순 한나라당 최고위원

"당내 최고의결집행기관인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호남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6일 한나라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박재순(64) 한나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일부에서는 호남을 대변할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어 이명박 대통령이 호남에 공약했던 내용들이 '다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선과 올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 승리를 위해 온몸을 내던졌다는 공을 인정받아 이번에 최고위원이 된 박 위원장은 친이명박 계열이라는 비판으로 막판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호남 몫 최고위원으로 박 위원장만한 인물이 없다는 호남지역 의견이 당 지도부에 전해지면서 최종 낙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 기획관리실장, 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 등을 역임한 박 최고위원은 "40년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고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호남지역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나아가 이 대통령이 호남권에 내걸었던 주요 공약 및 현안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를 설득하고 압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국회 또 당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위원장이 공석이고 여수엑스포 정부 유치위원회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점, 또 한전 민영화 문제로 나주 혁신도시 건설 차질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 있는 점 등 여러 지역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에 호남은 불모지대'라는 지적에 대해 "호남 외연 확대는 단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국민통합을 위해 잘못된 정책들과 현안들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한나라당이 호남 지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실용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의원들 "호남민에 더 가까이…"

지난달 여수 방문 간담회

각종 민원 '애프터서비스'

▲수산업 면세유 인상분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 경유 사용자에 대해 1년 동안 한시 지원하고 기타 유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 ▲양식어류 정부 수매 → 생산량 수급 예측할 수 있는 양식어류에 대한 정부 수매는 곤란 ▲율촌 제2산단 국민임대산단으로 조기 조성 → 현재 용역 중으로 개발 방법 결정 곤란 ▲여수 수산종합센타와 거문도 선어위판장 건립 → 예산 반영되도록 협의 추진 계획

지난달 25일 여수를 방문, 각종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민원을 들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원을 제기한 단체에 알려준 처리 결과들이다. 앞으로도 이들 민원을 계속 관리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김형오·이상득·윤두환·이정현·여상규 의원 등은 당시 수산업 및 양식업 종사자, 여수 시민단체 관계자, 상공회의소 관계자, 농민단체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민원 사항을 꼼꼼히 기록한 뒤 해당 부처에 해결 방안을 부탁하고 부처에서 되받은 답변과 대책을 최근 해당 단체 등에 보냈다.

이들이 당시 받은 건의는 20여 항목. 의원들은 이 건의사항을 분야별로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받아 다시 정리한 뒤 민원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답변의 상당수는 '불가' '곤란' 등이었지만 친절한 민원 처리를 받은 해당 단체 관계자들은 고맙다는 뜻을 이들 의원에게 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여수 방문을 주선한 이정현 의원은 "한나라당의 대 호남 정책은 진정성·현장성·계속성이 중요하다"며 "이 차원에서 이번 여수 방문 결과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만들어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권교체로 인해 호남인들이 인사 및 지역 차별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불안감이 적지 않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한나라당이 호남에 대해 진정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부의장에 이윤성·문희상 의원

사무총장엔 박계동 前의원

국회는 16일 18대 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여당 몫에 이윤성〈사진 왼쪽〉 한나라당 의원을, 야당 몫으로 문희상 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윤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국회부의장 선거에서 총 투표수 248표 중 216표, 문희상 의원은 총 투표수 238표 중 223표를 얻었다.

이 의원은 KBS '9시뉴스'를 3년간 진행한 앵커 출신의 4선 의원으로 신한국당 대변인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이회창 전 총재 대외협력특보 등 당직을 두루 거쳤다.

문 의원은 김대중(DJ)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과 열린우리당 의장을 역임한 4선 의원이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18대 국회 전반기 사무총장으로 박계동 전 한나라당 의원을 뽑았다.

제14,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한나라당 공작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역할을 했으나, 18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성폭력 논란' 김월출 광주시의원

"나는 결백…여성단체에 법적 대응하겠다"

광주지역 여성단체들로부터 '성폭력 연루 의혹'을 받으면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광주시의회 김월출 의원이 여성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 기자회견과 피켓시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성폭력 의혹을 제기, 명예를 훼손당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법에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해 시위를 주도한 여성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1인당 1천여만원의 민사소송을 추진하고 형사 고소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피해자라는 여성이 지난 1일 광주시의회에 나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자필로 '진실을 밝힙니다'라는 유인물을 전달하는가 하면 본회의장 입구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여성단체 관계자들에게 항의도 했다"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입을 다물고 근신해서만 해결될 수 없고 사실규명을 위해 법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법원의 판단 결과, 자신의 유죄가 나올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성단체측은 "김의원이 성폭행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검찰의 비위사실통보서가 의회에 도착한 만큼 이를 공개하면 모든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 연장안' 국회 통과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국군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파병연장 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199명 중 찬성 187표, 반대 10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총 359명으로 구성된 국군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이 내년 7월까지 레바논 남부 티르시 지역에 주둔하면서 작전지역에서 감시.정찰과 검문소 운용, 레바논군 협조.지원, 민사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